



주간통일정세 2012-13(2012.03.19~03.2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1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일성 생일 기념 평양서 친선예술축전(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번 축전에 세계 5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유명 국내외 콩쿠르 수상자와 배우로 구성된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및 해외동포예술단과 북측 예술인들이 참가한다고 전함.

- **청년동맹 1비서에 전용남...리용철 해임(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를 해임하고 후임에 전용남을 기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이날 평양에서 제47차 전원회의를 열어 "1비서 리용철을 연령상 관계로 해임소환하고 전용남을 새 1비서로 선거했다"고 전함.
 - 리용철은 리화선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로 2007년 12월 청년동맹 1비서가 됐으며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에 포함됨.

- **北 4월13일 김정일 사후 첫 최고인민회의(종합)(3/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를 내달 13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87호)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4월11일과 12일에 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도 발표했다.
 -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수정 및 보충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등임.
 -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추대 또는 재추대할 수 있어 내달 열리는 12기 5차회의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직 승계 여부가 주목됨.

- **北 당대표자회 절차 돌입...시·군당대표회 진행(3/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시, 군 당대표회들이 진행됐다"며 "대표회들에는 시(구역), 군의 기관, 기업소, 공장, 협



동농장을 비롯한 각급 단위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 통신은 "대표회들에서는 노동당의 강회발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군과 당원들을 도 당대표회 대표자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추천된 대표자 후보자들을 도(직할시) 당대표회 대표자들로 선거했다"고 전했다.

● 김정일 사망 100일...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째인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위원장의 '태양상' 앞에서 묵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평양방송도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부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실황중계했음.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장군님(김정일)의 서거 100일에 즈음해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며 묵상하셨다"고 전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태중수, 김영일,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이 동행

● 김정일 사망 100일...北 대규모 추모대회(종합2보)(3/25, 조선중앙방송)

- 지난해 12월17일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100일 중앙추모대회'가 김 위원장 사망 100일째인 25일 오전 11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음.
- 김일성광장 외에도 김일성경기장,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광장 등 평양시내의 주요 광장에는 수십만명이 운집해 조선중앙방송의 중앙추모대회 생중계를 청취했고 지방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됐음.
- 중앙추모대회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이 주석단에 자리했음.
-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박도춘, 태중수, 김평해, 문경덕, 김영일, 김양건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도 주석단에 함께했음.



- **北김정일 100일 애도 종료...3대세습 '굳히기'(3/25,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째를 맞은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추모대회를 치름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100일 간의 공식 애도를 마무리했음.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당·정·군의 고위간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데 이어 오전 11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된 '100일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음.
 - 북한은 지난 100일 동안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다양한 결정과 사업을 벌이면서 김 위원장 유혼을 앞세워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다져왔음.
 - 이 기간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해 이뤄진 주요 결정과 사업으로는 ▲2월16일(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 ▲김 위원장에게 대원수 칭호 수여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등 제정 ▲김일성·김정일 기마동상 건립 등을 꼽을 수 있음.

■ 김정은 동향

- 3/25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3.25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3.25,중·평방·중앙TV/실황중계)
 -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추모사),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추모연설),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장성택, 김정각,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축, 김창섭 외/노수희('범민련' 남측본부의장) 등 참석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부위원장을 경제, 과학기술 등 비군사분야 지식도 체득한 '지식경제시대의 이상적인 영도자'라고 추켜세우고 '유훈을 단숨에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선전(3.19,조선신보/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영도력-4)
- 최영림 내각총리, 3.16~17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수성천종합식료공장 등 咸北 청진시 여러부문사업 현지시찰(3.19,중통)
- 김영남, 3.19 독일 대통령에 선거된 '요아힘 가우크'에게 축전(3.21, 중통·평방)
- 김정일 위원장 사망 100일(3.25)을 맞으며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한 사업(금수산태양궁전, 영생탑 건립 등)과 유훈관철에 모든 것은 지향시켜 왔다'며 '김일성 주석 100돌 생일과 당대표자회를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고 독려(3.22,중통·노동신문/선군태양을 받드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모)
- 최영림 내각총리, 3.22 만수대지구 인민극장 건설정형 현지요해(3.22,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7호(3.22字), 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소집(평양) 및 4.11·12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등록고지(3.24,중통·중·평방)
- 北,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市(구역), 郡 당대표회를 진행(3.24,중통)
- 김정일 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으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 △당의 선군정치 구현, △중요대상공사 기일에 완공 등 '유훈 관철'을 강조하며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로 만들기 위한 총진군' 독려(3.25,중통·노동신문 사설/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나. 경제

● 北,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자유치에 성과(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기업과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 간의 합영·합작 계약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윤영석 합영투자위원회 부국장은 중앙통신에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유리하게 변화되는데 따라 합영·합작 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풍부한 희토류 광물자원과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대규모 투자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 윤 부국장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새로 채택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충했다"며 "두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공



동관리 사업은 세계적으로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협조형태이지만 조중 (북중)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 군사

- 북, 미사일 동체 동창리 운반 발사준비(종합2보)(3/25, 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미사일(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 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운반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
 - 합참과 연합사는 이날 "한국군과 미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로 운반해 건물 내에서 발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은 평양 산음동의 한 병기공장에서 특수 제작된 화물열차에 미사일 동체를 실어 24일까지 동창리 발사기지 인근 조립건물로 운반했으며 추진체와 동체 조립 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임.

- 기타 (대내 군사)
 - '광명성-3호' 발사 계획 관련 반향
 -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과학기술위원회 국장 등이 '위성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우주강국으로 발전해나가기에 염원한다'고 표명(3.19,중통)
 - 한상복(내각부총리 겸 전자공업상), 조일광(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장) 등, '평화적 우주이용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 계기' 언급(3.19,중방)
 - 김일성종합대 역학부 교수 태기훈, '광명성-3호 발사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이며, 전문가와 기자를 초청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3.22, 조선신보)

라. 사회·문화

- 北 조선국립교향악단 美공연 재추진(3/22, AP통신)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 소재 북한 구호단체인 비영리법인 글로벌리소스 서비스(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이날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을 방문, 애틀랜타 등지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北주민 사망 원인 12%는 흡연<WHO>(3/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의 전체 사망자 가운데 12%가 흡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WHO는 최근 발표한 '담배로 인한 사망률 보고서'에서 북한의 30세 이



상 사망자 중 12%는 사망 원인이 흡연이며 이는 세계평균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남성의 경우 30세 이상 사망 중 13%, 여성의 경우에는 11%가 흡연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WHO는 기관지암과 폐암 사망 중 71%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흡연자들이 암으로 사망할 개연성이 크다고 전함.

● 北 평양시에도 하루 2시간만 전기 공급(3/22, 좋은벗들)

- 북한이 올해 들어 평양시에 전기를 하루 평균 2시간 안팎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22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47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오후 6시~10시 하루 평균 4시간씩 전기를 공급하다가 올해 들어 공급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음.
- 소식지는 중앙당의 한 간부가 "중국에 수출하던 석탄을 발전소에 돌리기로 하면서 한때 전력공급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대중 석탄 수출이 계속되면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당에서도 전력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기대수명, 남한의 1985년 수준(3/25, 연합뉴스)

- 북한주민의 기대수명이 남한보다 10세 이상 낮아 남한의 1985년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이 발표한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69.3세(남 65.6세, 여 72.7세)에 그쳤음.
- 이번 연구는 북한이 지난 2008년 15년 만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8년 당시 남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80.1세(남 76.5세, 여 83.3세)로 북한보다 10.8세 많음.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ITU에 '인공위성' 발사계획 신고(3/19,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다음 달 중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에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이 인공위성의 운용시한이 2년이라고 ITU에 신고했음.
-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위성이 12~16일 사이 오전 7시에 서 낮 12시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IMO가 일본 정부에 알



려움.

- **日 오사카부, 조총련계 학교에 보조금 유보(3/20, 교도통신)**
 - 일본 오사카부(大阪府)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했다고 20일에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에 의하면 오사카부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지사는 지역 내 8개 조선학교에 대한 2011년도 보조금 8천100만 엔의 교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추종하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 단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임.

- **美,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중단(3/22, 연합뉴스)**
 -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 계획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 국방부 조지 리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로켓 발사 계획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들로 인해 유해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최근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해발굴 노력을 중단했다"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규범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유엔, 北·이란 인권보고관 임무 연장(3/22, 연합뉴스)**
 -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2일 북한과 이란의 인권실태 조사를 맡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소산"이라며 "EU가 미국의 뿌리 깊은 적대 정책을 좇아가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

- **美, 북미대화 구체적 협의 내용 밝히지 않겠다(3/23, 연합뉴스)**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작년에 이미 위성 발사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미대화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사망 이전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측에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8월부터 지난달 2.29 합의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북미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함.

- **〈핵안보 D-2〉 美, 北로켓 저지 中·러에 협조 요청(3/2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4일 밝혔음.
 -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수반들과 쌍방향으로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교도뉴스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 <핵안보 D-1> 국제사회 '北로켓발사' 우려 예고(3/25, 연합뉴스)
 - 6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로켓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북의 로켓 발사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 북한은 특히 2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며 국제사회의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와 로켓발사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차단공세에 나섰다.
 - 북한의 강경입장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핵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 <한미 정상, '北 로켓' 굳건한 동맹 재확인>(종합)(3/25,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이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난 16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음.
 -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 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나. 6자회담(북핵)

- 北, ITU에 '인공위성' 발사계획 신고(3/19,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다음달 중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에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이 인공위성의 운용시한이 2년이라고 ITU에 신고했음.
 -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위성이 12~16일 사이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IMO가 일본 정부에 알렸음.



- **리용호 "IAEA에 사찰단 파견 요청"(3/19,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는데, 4월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과의 양자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함.

- **美, 北 위성발사는 북미합의 위반(3/19, 연합뉴스)**
 - 빅토리아 놀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연합뉴스가 전함.
 - 놀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구를 요구받고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2월29일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이지만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함.

- **北 "광명성 3호 발사 북미합의에 저촉 안돼"(3/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밤 내놓은 '위성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발사는 조미(북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제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함.
 - 논평은 "우리는 이미 결실 있는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모든 나라의 합법적 권리에 기초해 발사계획을 공개하고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밝힘.

- **北 "위성발사는 김정일 유훈"(3/20, 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작년 12월에 이미 광명성3호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당시 미국과 북한은 고 김일성 북한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행사로 올 4월15일 전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놓고 트랙 2(민간채널)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짐.



- 워싱턴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일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15일 북한 당국자가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북한과의 협의에 나섰던 미국 측 트랙 2 관계자는 "내가 보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위성발사를 유엔결의의 직접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사실을 미국 행정부 당국자에게도 전했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美 "北사찰단 파견문제 IAEA와 협의중"(3/21,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에 핵 사찰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IAEA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빅토리아 놀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놀런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IAEA가 북한의 초청 사실을 확인한 보도를 봤다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IAEA와 협의하고 있으며 IAEA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는 미국은 IAEA가 초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질문에 "IAEA의 결정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우려는 이(북한) 정권의 신뢰도와 약속준수 여부이며 그들도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놀런드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이 밝힌 한미일 3자회담은 언제 열리며 북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날씨는 잡히지 않았으며 클린턴 장관은 늦은 봄 즈음에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와 상대측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도 주요 의제지만 회담의 목적은 역내 이익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필리핀, 北로켓 추진체 자국 해역 추락 우려(3/21, ABS-CBN)**

- 필리핀은 21일 자국 동부 해역에 북한 '광명성 3호' 로켓 2차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이 지역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6자 회담이 열려 제반 문제점들이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필리핀 ABS-CBN방송이 전함.

● **中, 북-중 국경 마을에 탈북자 신고호출기 설치(종합)(3/23, 연합뉴스)**

-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북-중 경계 지역에서 중국의 탈북자 단속과 체포활동이 더 강화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전함.
- 특히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중 경계지역 한 마을에 탈북자 접촉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인 신고호출기를 시범설치하고 이를 북-중 국경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IAEA 자체로는 북핵문제 해결 못해(3/23, 블룸버그 통신)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당국과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IAEA 영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2007년 북한과의 마지막 핵사찰 협상에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IAEA는 단지 우리나라 농축 핵심 시설을 조사하는 쪽으로 북한과 타협해 다른 시설들에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의 농축프로그램에 관련된 장소는 핵심 시설 이외에 최소 두 곳이 더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더욱 폭넓은 핵사찰 문제는 결국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3. 대남정세

- 北 "북핵성명 발표뎀 선전포고 간주"(종합2보)(3/21,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를 통해 "서울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기신 백두산 위인들의 염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으로,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서울회의를 북침 핵전쟁도발의 전주곡으로 되게 하려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도발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내용을 전하며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서울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곧 수치와 모욕으로 된다"며 "누구든지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한 남조선 괴뢰도당을 조금이라도 비호·두둔하려 든다면 반역의 무리를 매장하기 위한 우리의 무차별적인 타격권에 함께 들게 될 것"이라며 핵안보정상회담 참가국에까지 위협함.
- 천안함 2년...北 "南측 모략극" 비난공세(3/25,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천안함 폭침 2주년(3월26일)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46 용사 참배 등 국내에서는 다양한 추모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이를 의식한 듯 북한 매체들은 매일같이 "천안호사건은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역적패당의 특대형 모략극" "천안호 기념행사는 총선 역전용 북풍(北風)몰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천안호 침몰사건은



우리와 하등의 상관도 없다"며 "(남한이 천안함 사건을 부각하는 목적은)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에 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보수패당에게 불리해진 다가오는 총선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 기타 (대남)

- '北 천안함 폭침' 2주년 관련 '이○○패당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작한 모략극'이라고 왜곡 주장(3.21, 노동신문·중방/거덜이 난 유치한 자작극)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3.23), 남한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광명성-3호' 발사를 거론한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3.23, 중통)
-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괴뢰패당이 美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모의판으로 만들 흥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인 南에서 수뇌자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3.24, 우리민족끼리/국제적 망신을 불러오는 난동/반공화국 핵소동마당으로 만들려는 흥심)
- '北, 천안함 폭침' 2주년(3.26) 관련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등은 '침몰사건을 北에 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보수패당에게 불리해진 총선정세를 역전시켜 보려는데 있다'고 비난(3.24, 우리민족끼리/천안호 망령을 살려서 얻을 것은?)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북핵성명 발표때 선전포고 간주"(종합2보)(3/21)

- 북한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발표'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를 통해 "서울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기신 백두산 위인들의 염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으로,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도발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음.
- 통신은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서울회의를 북침 핵전쟁도발의 전주곡으로 되게 하려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도발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내용을 전하며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서울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곧 수치와 모욕으로 된다"며 "누구든지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한 남조선 괴뢰도당을 조금이라도 비호·두둔하려 든다면 반역의 무리를 매장하기 위한 우리의 무차별적인 타격권에 함께 들게 될 것"이라며 핵안보정상회담 참가국에까지 위협했음.
- 북한의 이런 위협과 경고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86차 라디오 연설'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첫 반응인 셈임. 조선중앙통신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철두철미 역적패당이 광란적으로 벌이는 반공화국 핵 소동의 연속판, 확대판"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핵물질 보유 및 관리에서 국제적 규범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 이어 "북핵문제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에 상정될 아무런 명분도 없다"며 "세계최대의 핵 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을 논하는 수뇌자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음.

● "IAEA 자체로는 북핵문제 해결 못해"(3/23)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당국과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IAEA 영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음. 통신은 지난 2007년 북한과의 마지막 핵



- 사찰 협상에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IAEA는 단지 우리늄 농축 핵심 시설을 조사하는 쪽으로 북한과 타협해 다른 시설들에는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하이노넨 전 차장은 북한의 우리늄 농축프로그램에 관련된 장소는 핵심 시설 이외에 최소 두 곳이 더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더욱 폭넓은 핵 사찰 문제는 결국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IAEA로서는 "북한이 고농축 우리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IAEA가 완전한 해결책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 측이 다른 장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하이노넨의 설명임.
 - 하이노넨은 또 북한은 우리늄 전환공장과 시험용 연료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90년대 말 원심분리기를 더 만들고자 충분한 양의 특수강과 탄소섬유를 수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노넨은 평양 내 핵시설들에 대한 조사 활동을 이끌기도 했으며 현재 하버드 대학 벨퍼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있음.
 - 북한은 지난달 29일 미국과 식량(영양)지원을 받는 대가로 IAEA 사찰단의 입국 허용 등에 합의, 현재 IAEA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위성발사는 북미합의 위반(3/20)

-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구를 요구받고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2월29일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이지만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미국은 위성발사에 앞서 IAEA가 사찰단을 파견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질문에 "초청의 상세한 내용과 IAEA가 무엇을 볼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위성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



- 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음. 놀런드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도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탄도미사일기술로 발사되는 위성은 유엔경제 위반이며 특히 유엔 결의 1874호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 유엔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른 물체의 발사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놀런드 대변인은 이밖에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발표 이후 북한과의 추가 접촉은 없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의 계획은 극도로 나쁜 생각이며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실에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 <고침> 국제(北 위성발사는 김정일 유훈.. 작년 미국에 통보)(3/21)

- 북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작년 12월에 이미 광명성3호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고 김일성 북한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행사로 올 4월15일 전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놓고 트랙 2(민간채널)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워싱턴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일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15일 북한 당국자가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북한과의 협의에 나섰던 미국 측 트랙 2 관계자는 "내가 보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위성발사를 유엔결의의 직접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런 사실을 미국 행정부 당국자에게도 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성발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측근들이 작년 가을 어느 때쯤 새해에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위성발사 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이 소식통은 풀이했음.
- 이는 또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후계세력이 북미합의에 대한 직접 위반이라는 미국의 경고와 2.29 합의로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임.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고위급 대화에서 미국이 24만t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우리농 농축활동 중단,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
- 소식통은 2.29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북한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목적이 어떻든 미사일 실험은 협상 중인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미 실행 중인 유엔 결의에 직접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직접 경고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위성발사계획을 발표한 지난 16일 "어제 오후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이



이(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그 메시지를 (북측으로부터) 전해 받은 사람은 당시 (미국 정부의) 관련된 훈령이 없는 상태였지만 로켓 발사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데이비스 특사 등은 당시 김계관 부상에게 북한이 위성발사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든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김계관도 위성을 발사할 경우 협상 전체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베이징을 떠났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일단 미국과 합의한 후 미국이 위성발사를 발미로 합의를 깨면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 <UEP에 광명성3호까지.. 판 키우는 北-고심하는 美>(3/21)

- "북한이 통큰 담판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 2.29 베이징 합의 발표로 북미 협상의 추이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나선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북핵 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새로운 협상전략'에 주목했다.
- 그가 평가하는 북한의 '새로운 협상전략'의 특징을 보면 이렇다. 우선 북한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쉽게 논쟁이 벌어지는 비핵화 문제를 먼저 다루지 말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선(先) 관계개선 후(後) 핵문제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길게는 20년간, 짧게는 지난 2003년부터 가동된 북핵 6자회담을 운영해온 9년간의 경험을 북한식으로 평가해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두 번 산 말을 다시 사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선행을 강력히 추진해온 것과 같은 대응이라는 것인.
- 북한의 속내는 이달 초 미국 시라큐스대학 주최 세미나와 미국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참가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입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주제발표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면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상은 "한국에 핵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핵우산에 포함시켜 주면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함.
- 북한의 신(新)전략을 실감있게 설명하면 미국을 향해 "우리보다 친하게 지내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핵문제를 다루니까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에 미리 수립해둔 대미 협상전략임을 알 수 있다.
- 북한은 지난달 베이징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정지 등에 합의하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미국측에 설



- 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은 물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북한은 '베이징 합의와 인공위성 발사는 별개'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음.
- 리용호 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우리농축프로그램(UEP) 감시 사찰단의 파견을 16일 IAEA에 요청했다"며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과 한 양자합의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음. 결국 북한은 미국 측에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전체 협상을 깰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제한적이거나 협상을 할 것이냐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됨.
 - 만일 미국이 협상쪽으로 기울면 북한은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펼 것으로 보임. 이는 '김정일의 유훈'으로 포장될 수도 있음. 실제로 김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나섰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미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이 이렇게 강공을 펼치고 나설 수 있는 배경은 역시 우리농축프로그램의 위력 때문임. '2.29 합의'에서 북한은 UEP의 '임시중지' 사실을 공개했음. 언제든 다시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런 표현에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영변에 있는 UEP 시설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임.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영변 현지에서 살펴본 바 있음. 초 현대식 제어시설까지 갖춘 상황에서 원심분리기 2천개가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돼 더욱 미국을 긴장하게 했음. 우리농 축방식의 핵무기를 만드는데는 작은 공간에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함. 특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의 경우 간단한 이동장비만 있으면 일반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함. 미국이 왜 북한의 HEU 또는 우리농 축계획을 무서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임. 만일 북한이 제조한 고농축우라늄이 중동의 특정국가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수 있음.
 - 게다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로서는 이란의 핵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가급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됨. 따라서 미국은 일단 북한의 UEP 시설을 가동중단시킨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으로 하여금 이 시설의 위험도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카드를 총동원해 '통큰 담판'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농 핵무기와 함께 이를 운반할 수단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지로 읽힘. 결국 UEP의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려는 미국과 그런 미국의 조바심과 국내정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북한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된 셈임.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며 2.29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IAEA 사찰단



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음. 바야흐로 북한의 압박에 고심하는 미국의 선택에 시선이 집중되는 국면임.

● **北 조선국립교향악단 美공연 재추진(3/22)**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 소재 북한 구호단체인 비영리법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이날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을 방문, 애틀랜타 등지에서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는 2008년2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공연한 뒤 답방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무산됐음. 이번 공연 추진은 최근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정명훈 서울시립 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나온 것임. 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 발표로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어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스프링스 회장은 "이번 공연이 올해 봄에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14년간 그래미상을 수상한 록그룹인 캐스팅 크라운스(Casting Crowns)의 방북을 포함해 3차례 북한 공연을 성사시킨 바 있음. 그는 "(이번 공연으로) 북한 주민들을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들도 우리를 더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공연이 양국 관계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중단(3/22)**

-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 계획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미 국방부 조지 리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로켓 발사 계획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들로 인해 유해발굴 작업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리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해발굴 노력을 중단했다"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규범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 국방부의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은 2005년 중단됐다가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뒤 이달초 재개됐음.

● **美국방부, 北 로켓 발사 포기 거듭 촉구(3/24)**

-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가 본격적 단계에 들어갔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 로켓 발사 계획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존 커비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



는 국제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 로켓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남한 및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은 로켓 발사가 관측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오바마 "北, 로켓발사시 기회 상실"(종합2보)(3/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의 로켓발사는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립을 심화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은 미래 협상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임시 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했으나 이번 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로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나하면 바로 기회"라며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 같은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그는 "북한은 이미 여러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추가적인 고립, 더 강한 제재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은 미국이 다시 한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서 "21세기에 아태지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그 초석은 바로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강한 동맹에 있다"고 밝혔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해 "양국에 혜택이 가고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미국도 약 7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6월에 만나서 강화할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 접경에 탈북자 신고호출기 설치(종합)(3/23)

-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탈북자 단속과 체포활동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특히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중 경계지역 한 마을에 탈북자 접촉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인 신고호출기를 시범설치하고 이를 북-중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에 사는 재중동포(조선족) 최홍매(가명)씨는 "룡징시 공안국과 변방부대가 최근 룡징시 싰허(三合)마을에 탈북자 신고호출기를 집집마다 설치했다"며 "탈북자가 집에 찾아오면 집주인이 몰래 호출기를 눌러 파출소에 연락하게 돼 있더라"고 밝혔다.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은 중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 대체로 접경지역의 중국인 민가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곤 함.
- 최씨는 "며칠 전 싰허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뚜이장지'라 부르는 이 호출장치를 봤다"며 "벽에 설치된 빨간색의 버튼식 호출기를 누르면 바로 파출소로 신호가 간다. 호출기에는 마이크도 함께 설치돼 집주인이 탈북자와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싰허 파출소로 전해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파출소로 신호가 가면 공안원(경찰)과 변방부대 군인이 해당 민가로 출동해 탈북자를 체포하는 방식임. 일종의 '폴리스 콜(Police-call)' 시스템임. 우리 경찰도 최근 이런 시스템을 금은방, 편의점 등의 업소에 설치해 강도 용의자 체포에 활용하고 있음.
- 연변 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변방부대에 근무하는 한 조선족 장교는 "싰허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탈북자 신고체계가 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비용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만간 이런 시스템을 중-조 국경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탈북자 북송문제로 중국을 강하게 비난한 이후 위로부터 각 변방부대에 특별지시가 내려왔다"며 "국경 전역에서 탈북자 단속이 심해지고 특히 변방 도시로 들어가는 행인들에 대한 증명서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중국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채신영(가명)씨도 "이달 중순 지린(吉林)성 연지(延吉)시로 가는 버스에 탔다가 탈북자들이 중국 변방부대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중국 당국이 한국여권을 가진 사람까지도 짐 검사를 하며 단속을 강화하더라"고 전했다. 탈북자 양모씨는 "탈북자 북송문제 이슈화로 중국이 탈북자 단속에 더 열을 올린다고 들었다"며 "탈북자 북송을 저지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만 더 위험해진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라. 일·북 관계

● 日오사카부, 조총련계 학교에 보조금 유보(3/20)

- 일본 오사카부(大阪府)가 조선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일 이 통신에 의하면 오사카부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지사는 지역 내 8개 조선학교에 대한 2011년



도 보조금 8천100만 엔의 교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음. 북한을 추종하는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 단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임. 마쓰이 지사는 "조선학교와 조선총련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음.

- 오사카부의 이번 결정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조선학교 고교과정에 대한 무상화 여부를 결정할 문부과학성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조선학교 측은 "그동안 성실하게 (오사카부의 요구 등에) 대응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민족교육에 대한 정치 간섭이다"고 반발했음. 오사카부는 애초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교직원 사무실 등에서 철거했는지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한 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음.

● "日, 北 위성 육지·해상 2단계 요격 검토"(3/21)

-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를 이탈해 자국 영토에 낙하할 경우 육지와 해상에서의 2단계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 발사기와 레이더 등 관련 장비를 오키나와(沖縄) 본토와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 북한 위성의 비행 궤도 해역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배치할 방침임.
- 북한의 위성이 궤도를 벗어나는 경우 수도권 방어를 위해 동해 쪽에도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은 이지스함 가운데 4척이 SM3를 탑재하고 있음. SM3는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따라서 북한의 위성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1단계로 SM3를 동원하고, 격추에 실패할 경우 PAC3를 발사한다는 것임. 미사일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미군의 전자정찰기인 RC135S도 북한 위성의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미일 양국의 공조도 강화됨.
-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 등에 PAC3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그는 패트리엇의 발사기와 레이더 등 관련 장비를 오키나와와 이시가키지마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도에 PAC3를 오키나와에 정식 배치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비로 본토로부터 PAC3를 이동시킬 것으로 보임.

● 日 참의원, 北에 위성발사 중단 요구(3/23)

- 일본 참의원(상원)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23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보이는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항의하고, 발사 자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결의안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우리나라와 북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음.

● "日, 北로켓 요격 위해 이지스함 3척 배치"(3/24)

- 일본은 북한이 4월 중순 발사할 예정인 로켓이 일본 인근 공해로 향할 경우 요격을 위해 동중국해와 동해에 3척의 이지스함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23일(현지시간) 밝혔음. 이 소식통은 북한 로켓이나 그 파편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또 오키나와, 이시가키, 미야코 섬과 도쿄의 방위성 본부 및 다른 곳에 있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이 소식통은 방위성이 오는 30일 자위대에 북한 로켓 요격을 위한 미사일 시스템 준비 명령을 내리는 문제를 지방 정부와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기 타

● "北, ITU에 '인공위성' 발사계획 신고"(3/19)

-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다음달 중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에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음. 북한은 이 인공위성의 운용시한이 2년이라고 ITU에 신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는 다음달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위성이 12~16일 사이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발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IMO가 일본 정부에 알려왔음.

● 美 "北사찰단 파견문제 IAEA와 협의중"(3/21)

- 미국은 북한에 핵 사찰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IAEA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밝혔음. 눌런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IAEA가 북한의 초청 사실을 확인한 보도를 봤다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IAEA와 협의하고 있으며 IAEA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은 IAEA가 초청을 받아들여기를 바라는냐는 질문에 "IAEA의 결정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우려는 이(북한) 정권의 신뢰도와 약속준수 여부이며 그들도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



했음.

- 놀런드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이 밝힌 한미일 3자회담은 언제 열리며 북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날씨는 잡히지 않았으며 클린턴 장관은 늦은 봄 쯤에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와 상대측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도 주요 의제지만 회담의 목적은 역내 이익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 <고침> 국제(美 "북미대화 구체적 협의 내용 밝히지 않겠다")(3/23)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작년에 이미 위성 발사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미대화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김정일 사망 이전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측에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8월부터 지난달 2.29 합의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북미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음.
- 놀런드 대변인의 이런 답변은 북한이 작년 12월에 이미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풀이됨.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에반스 리비어는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정일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15일 북한 관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음. 그는 오바마 행정부도 이미 북한측 카운터 파트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강력히 경고하기 까지 했다고 밝혔음.
- 놀런드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물체의 발사도 유엔결의 1874호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지도자(김정일)의 사망 전 이든 후든 미국의 입장에 대해 추호도 의문을 가질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놀런드 대변인은 미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경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를 국제사회의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음.

● <핵안보 D-1> 국제사회 '北로켓발사' 우려 예고(3/25)

- 26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로켓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북의 로켓 발사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임.
- 북한은 특히 2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며 국제사회가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와 로켓발사 문제 등이 논의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 차단공세에 나섰다. 북한의 강경입장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한 양측을 상대로 자제를 설득중인 중국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북한을 거두고 있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부장조리(차관보)는 20일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해외순방 설명회에서 "북한 위성발사는 의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이 회담에 참석하는 다른 지도자들과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핵안보회의 자체 보다는 양자회담 계기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됨.
 - 이를 반증하듯 24일 방한한 반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하고,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했음. 김성환 외교부장관도 22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북핵 및 이란핵,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 등은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여러 국가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양자회담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핵안보 정상회의를 전후로 열리는 양자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명백히 했음.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핵무기를 장거리 운반수단으로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도 공유했다"고 말해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4~29일까지 27개 국가·국제기구의 28명의 정상급 인사와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24일 반총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3강 정상과 갖는 양자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북한의 로켓 발사 철회를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 오바마 대통령도 26일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발사 철회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는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및 로켓발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미 국가안보회의(NSC)의 제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 수장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새모어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메드 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수장들과 쌍방향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교도뉴스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음.

- 유엔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전략 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발사계획의 취소를 촉구해온 만큼 서울회의 참가국 정상들과의 접촉에서 이같은 입장을 다시 천명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무대에서 북핵문제나 로켓발사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겠지만 장외 무대인 참가국 정상들의 양자회담 석상에서는 긴급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 로켓발사 문제가 주요 단골 소재로 논의되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구체화 될 공산이 크다는게 중론임.

● 호주 총리 "북핵,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3/25)

-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핵 활동이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길라드 총리는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길라드 총리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핵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음. 길라드 총리는 또 "호주는 과거 북한이 내렸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허용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영변 핵시설 핵활동의 중단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향해야 할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교체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북한 지도자 교체 과정에서 발전된 변화의 기회가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것은 곧 핵과 미사일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경제를 개방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문제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음.
- 길라드 총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2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의제를 재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했던 '더 안전한 세상'이란 비전을 실행하고, 핵 테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세계 핵 안보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기대했음. 길라드 총리는 한-호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호주의 네번째로 교역 파트너이자 세번째 수출국"이라며 "두 나라의 오랜 우호관계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이라고 밝혔음.

- 길라드 총리는 지난해 4월 방한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당시 DMZ 방문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시작됐던 두 나라의 오랜 동맹관계를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유대관계는 상호존중과 가치의 공유라는 기반 아래 더욱 깊고 지속적인 우정으로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25일 오바마와 '北로켓발사' 해법 모색(3/20)**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5~26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3개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비핵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 이 대통령은 이번 연쇄회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오는 25일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양국 동맹을 재확인함. 양국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11번째로 이 대통령 임기 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세 번째임. 특히 두 정상은 회담에서 지난해 말 김 위원장 사망과 북·미 합의,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함께 지난 15일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민들에게 호혜적이고 유익하게 운영돼 나가도록 하기 위한 양국 간 '원-원'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임.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미군기지과 전방 휴전선 감시 초소(GO·Guard Post)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통령은 이어 26일 오전과 오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강화 방안과 한·중 FTA 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양자간 경제협력 심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임.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은 노다 총리의 방한 시간이 짧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음.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 한반도 정세와 대북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29일까지 미·중·러 정상들을 포함해 모두 27개 국가·국제기구의 28명의 정상급 인사와 연쇄 정상회담을 벌임. 유럽연합(EU)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2명이 참석함.

● <한미 정상, '北 로켓' 굳건한 동맹 재확인>(3/25)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음.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난 16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음.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 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한 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음.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을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놓고 굳건한 공조를 확인한 것임.
-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정상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과 직전 의장인 오바마 대통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같은 분위기가 핵안보 정상회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미간 '2·29 합의'를 깬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와 달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다'는 양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위성 발사를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건 북한이나, 미사일 문제가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인도적 식량 지원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음. 공교롭게도 천안함 피격 2주년(26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과 대치 중인 최전방을 찾음으로써 이 같은 의미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양국은 제1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음. 두 정상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재협상을 넘어 '폐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교역·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협력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재임 중 11번째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는 이번까지 모두 7번의 회담을 개최했음.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번이 세 번째 방한으로 미국 대통령 중 4년 단일 임기 내 최다 방한 기록이기도 함.

● <李대통령-오바마 "친구"..우의 과시>(종합)(3/25)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의를 거듭 과시했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나의 친한 친구인 오바마 대통령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음. 지난해 10월 미국 국민방문에 이어 회동한 점을 언급한 것임.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난 가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한국말인 정(情)을 배웠다"면서 "오늘 다시 이 정을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음.
- 앞서 청와대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친구'로서 안부를 묻고(How are you, my friend?) 정상회담 사진세션에서는 이 대통령의 어깨에 스스럼없이 손을 얹으며 재임 기간 7차례의 한미회담을 통해 쌓은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방명록에 '청와대를 다시 방문해 양국의 각별한 우정과 동맹을 떠올리게 돼 기쁘다'(It is wonderful to be back in the Blue House and to be reminded once again of the extraordinary friendship and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라고 적었음.
- 나란히 모두 발언을 마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기지들로부터 나란히 2개씩 4개의 질문을 받았음. 질문은 예상대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 문제에 집중됐음. 양국 정상은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공조', '파트너', '협력'과 같은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이 공고함을 과시했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에는 나란히 걸어서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이동했음. 1시간30분간 이어진 만찬에서도 한반도와 중국 문제, 동북아 정세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받은 환대에 화답하는 의미로 오바마 대통령의 첫째딸 말리아와 둘째딸 사샤를 위해 마련한 장미색 팔찌와 전통 머리핀을 선물로 전달했음.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숙소 출발이 다소 늦어져 정상회담이 그만큼 지연되는 바람에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은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6시30분보다 15분가량 늦게 시작했음.

나. 한·일 관계

● **韓·日 "中에 북 로켓 발사 막아달라" 요청키로(3/23)**

- 한일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23일 합의했음.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스기야마 국장은 또 북한의 발사 계획은 지난 2009년 북한이 두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

다. 한·러 관계

● **<한국 선사 러시아 선원에 임금 체불 논란>(3/23)**

- 한국 선사가 러시아 선원들에게 최대 5개월치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음.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23일(현지시간) 국제운수노련(ITF)을 인용해 한국 선사가 자사 소유의 냉동어선 '예카테리나'에서 일해온 러시아 연해주 출신 선원 19명에게 3~5개월치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음.
- ITF 산하 '러시아선원노조' 부위원장 니콜라이 수호노프는 한국 마산항에 머물고 있는 예카테리나호 선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한국인 선주의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이에 ITF는 한국인 선주에게 러시아 선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음. 수호노프 부위원장에 따르면 러시아 선원들이 받아야 할 체불 임금은 15만 달러(약 1억7천만 원) 이상임. 러시아선원노조의 제보를 받은 후 ITF 한국 측 감독관이 선박에 올라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선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임금체불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음.
- ITF 감독관 포트르 오시찬스키는 "ITF 한국 측 동료가 어선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으며 그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선원들이 3~5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직접 서신 연락을 한 한국인 선주는 3월 말~4월 초 체불 임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음. 그는 "현재로서는 한국인 선주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ITF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선원노조는 한국인 선주가 이른 시일 내에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선박 압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라. 미·중 관계

● 美하원서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3/21)

-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이 결의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인권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테러·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음.
- 결의안은 중국이 국제난민보호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 복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또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자로 자동 규정해온 관례를 중단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탈북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음.
- 로이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핵안보 D-1>미중 정상, 북 로켓문제 논의 주목(3/25)

-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26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긴급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낮 서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자간 현안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북한이 4월중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문제가 주요 의제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 뉴욕 타임스(NYT)는 서울 정상회의의 공식적인 연설과 성명은 핵분열 물질의 단속 필요성에 집중되겠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의 양자회담을 비롯해 정상들 간의 비공식적 접촉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자신의 '프라하 선언'으로 태동된 만큼 이 다자회의에서 미국의 핵 통제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북한과 이란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 리더십은 국제사회의 물줄을 깨는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옳은 일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25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이어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한데 이어 26일 미중,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이 북한 지도



- 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것이 안된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문제 등을 놓고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비판공세가 고조됨에 따라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각인시켜야 하는 숙제를 마주하고 있어 북한의 로켓 발사방침과 관련해서도 보다 단호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대해 북한의 주요 후견국인 중국측은 일단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북한 입장을 거들고 있음. 중국은 다만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지나친 호전주의에 인내의 한계를 보이는 듯 하면서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면 북한측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26일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됨.
 - 중국은 특히 북한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발표' 등이 나올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뒤부터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중국 외교부의 워자오후이(羅照輝) 이주사(司. 국) 사장은 20일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대화를 격려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한반도의 장기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이에 따라 로켓발사 저지를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세에 후진타오 주석이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26일 오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미리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적인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임. 오바마 대통령은 미리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이란핵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마. 미·일 관계

● "美, 오키나와 주둔 해병 9천명 국외 이전"(3/25)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縄)에 주둔하는 미 해병 9천 명 안팎을 괌 등 국외로 이전하기로 거의 합의했다고 NHK방송이 25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의하면 양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주일 미군 재편계획 수정을 위한 외교·국방 심의관급 협의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중 4천 명 안팎은 괌으로, 또 5천 명 안팎은 괌 외의 해외로 옮기는데 거의 합의했음. 괌 외의 해외로 이전하는 5천 명 안팎은 하와이와 호주



- 북부 등 복수의 거점에 분산 배치해 오키나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음.
-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은 1만8천~2만1천 명에서 9천~1만2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가운데 8천 명을 광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으나 이번에 이를 수정, 광 이전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광 외의 해외 이전을 늘렸음.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주일 미군 재편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
 - 일본은 미 해병의 광 이전 규모가 줄어들 만큼 애초 합의했던 부담금 60억9천만 달러를 줄여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미국은 광으로의 비용 외에 하와이 등으로의 이전 비용도 일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됨.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이 일본에 기존 부담금 외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2006년 주일 미군 재편계획 합의 당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의 광 이전비 102억7천만 달러 가운데 일본이 60억9천만 달러, 미국이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했었음.

바. 미·러 관계

● "美-러 시리아 사태 관련 입장 가까워져"(3/22)

-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1일(워싱턴 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앞서 채택된 시리아 사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서에 대해 논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서명한 성명서는 유엔과 아랍연맹(AL)의 공동특사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시리아 사태 중재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시리아 정부에 휴전을 촉구하는 한편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매일 2시간씩 전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앞서 두 차례나 서방이 주도한 대(對) 시리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의장 성명서 채택은 지지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난 후 최근 1주일여 동안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미-러 양국의 입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아난 특사가 안보리의 통합에 건설적 역할을 하는데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래전부터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 한목소리를 내길 희망했다"며 "이번 안보리의 행동(의장 성명서 채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좋고 긍정적인 행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두고 서로 뭉치고 유엔과 AL의 공동특사를 지원하면서 한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평가했음.



-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비탈리 추르킨도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된 뒤 "안보리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취한 것에 만족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이 지속돼 시리아 위기 해결과 시리아인들 스스로의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 기 타

● "러, 2018년까지 나토 MD 대응태세 갖춰야"(3/20)

- 러시아는 2018년까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구축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리아노 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파트너들과 이 문제(MD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지만 어떤 경우든 상황 변화에 대비는 해야 한다"며 "2017~18년까지 (유럽 MD에 대응할) 충분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미국과 나토는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에 MD 기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 핵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MD 시스템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이같은 러시아의 요구에 미국과 나토가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MD를 둘러싼 양측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 개혁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군개혁이 사실상 완료됐으며 대다수 군부대들이 짧은 기간 안에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2011년 사이 첨단 군장비와 무기들이 군에 도입되면서 전체 군 전력에서 첨단 무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6%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전투 훈련 강도도 3배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한편 아니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발사 시험을 계속해온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볼라바'가 올해 10월 실전배치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란·北핵, 美 상이한 대응이 불안정 키워"(3/21)

- 이란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오히려 국제 사회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강하게 비판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란에 대해선 군사공격까지 거론하며 위협하고 반대로 핵무기가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선 달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이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유혹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임.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 '코메르산트 FM'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



사공격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핵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포기시키거나 완전히 폐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음. 그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다른 관리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란의 고위 지도부는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 "만일 군사 공격을 받으면 그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음.

- 라브로프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고조 상황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만일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너를 안 건드릴 것이다. 가벼운 제재는 가하겠지만 대신 계속해서 달라고 설득하고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음. 그러면서 핵무기와 로켓기술을 갖고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북한의 예를 들었음. 라브로프는 "북한이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미 몇 번이나 그것을 시험했으며 (그것을 운반할) 로켓 기술도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북한을 폭격하지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그는 "우리는 계속 즉각적인 협상 재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협상이 건설적 합의의 결과를 도출하는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만일 이란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위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폭격을 검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일부 이란의 이웃국가들은 몇 년 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의 운명도 만일 핵무기가 있었으면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음. 그는 "이같은 상황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장을 하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공격적인 트집잡기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이 먼저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은 아주 작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이란이 그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해소를 위해 이란과 '5+1 중재그룹'(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협상이 서둘러 재개돼야 한다며 4월 중에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美, 駐日 해병 서태평양 3개 거점 분산 배치"(3/21)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기동성이 높은 해병 증응부대를 서태평양의 3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과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을 통해 해병 공지기동부대(空地機動部隊·MAGTF)를 현재의 오키나와(沖縄) 한 곳에서 괌과 호주의 다윈 등 3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의 거점을 확대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본토 외에서는 최대 규모인 MAGTF의 제3해병원정군(약 1만8천명~2만1천명)으로 구성돼 있음. 2006년 미·일이 합의한 주일 미군 재편 계획에서는 원정군의 사령부와 후방 지원부대 8천명을 괌으로 이전하고 오키나와에는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1만 명을 주둔시키기로 했었음.
- 하지만 미 정부는 이를 수정해 괌으로의 이전 규모를 4천700명으로 축소하고 원정군의 사령부와 산하 주력 전투부대인 MAGTF의 제31해병원정부대(약 2천200명) 등 1만 명을 오키나와에 잔류시키기로 했음. 나머지 3천300명 이상은 미 본토와 하와이로 분산해 오키나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음. 이와 함께 MAGTF를 오키나와 외에 괌에도 상주시키는 한편 호주의 다윈에는 미 본토에서 약 2천500명을 파견하기로 했음. 파견 부대는 6개월 정도를 주기로 교체한다는 방침임. 이를 통해 오키나와 주둔 해병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등 주로 동북아시아를, 괌 주둔 해병은 서태평양 전체를, 다윈 주둔 해병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각각 담당토록 한다는 것임.
- 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통합작전구상'에서 전방 기지의 강화와 함께 기지를 분산해 적의 목표선택을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해병의 분산 배치는 이 구상을 구체화한 것임. MAGTF는 미 해병대의 기본적인 조직 단위로 사령부와 육상전투부대, 항공전투부대, 후방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며, 규모가 큰 순으로 해병원정군(2만~9만 명), 해병원정여단(3천~2만 명), 해병원정부대(1천500~3천 명)로 분류됨.

● <핵안보 D-2> 美, 北로켓 저지 中·러에 협조 요청(3/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4일 밝혔다. 케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수반들과 쌍방향으로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교도뉴스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일정과 별도로 각국 정상을 만날 계획임.
- 이에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음. 세이모어 정책조정관은 "미국은 미사일 발사가 매우 도발적이고 약속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북한에 납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초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거나 설득하는 데 맞춰"



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상세한 답변은 피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가장 적절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9년 북한이 두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

● <핵안보 D-1> 新華 "서울회의서 북핵 논의 안돼"(3/25)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북한 핵 문제 공론화를 통해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지 말도록 25일 촉구했음. 이 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핵 문제가 일부의 관심을 빼앗아 갔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서울 정상회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마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신화통신은 이어 중단 상태인 6차 회담이 이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결을 논의하는 적합한 마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는 보다 안전한 세계를 구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의제가 아닌 문제로 일탈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